

## 한국판 ‘카트리나’와 보수 정권의 위기관리능력 1)

이정철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한국 보수의 집토끼 전략과 ‘성공의 실패’  
 II. 이미 변화된 국민의 안보 패러다임  
 III. 재난의 원인과 위기대처능력을 구별해야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국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도력을 잃게 된 계기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잘못된 대처 과정이라는 주장이 있다. 장기화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대법관 정실 인사, 안락사 문제의 연방정부 개입 논란 등 보수 진영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지만, 카트리나에 대한 대응은 부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급전 직하시키는 시발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사실 부시 정부는 중도 정치의 아젠다를 선점해 집권하기보다는, 분열(wedge) 이슈 중심의 선거전략 그리고 9.11 이후의 분위기를 강조해 사회경제적 문제와 유리된 보수적 문화전쟁을 통한 재집권 전략을 추구했었다.<sup>2)</sup>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미국 보수의 리더십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카트리나 한방에 가버린’ 것이다.

과거와 달리 카트리나는, 안보가 국가안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그 영역과 포괄범위가 확대된 만큼 재난구호, 위기관리능력에 뒤쳐져서는 진보나 보수나를 막론하고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 I. 한국 보수의 집토끼 전략과 ‘성공의 실패’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을 돌아보면 부시 행정부가 즐겨 수행했던 좌우 분열 이슈에 의한 문화 전쟁 전략을 닮아있다. 대운하나 세종시 전략 그리고 대북 압박 정책 등은 한결같이 좌파 10년 청산론에 입각한 문화 전쟁 전략의 아류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 사회이면서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결집력마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집권 전략으로 보수

대 좌파의 대립 논리만큼 선명한 것은 없을 터이다. 굳이 한국 사회 개조 계획 등과 같은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반좌파 논리만으로도 ‘집토끼’ 즉 지지 세력의 결집을 통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자찬이 깔려있는 전략이다.

무릇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는 자신과 집권 세력의 이익을 내 놓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해 ‘고귀한 패배’를 각오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지도자의 철학에서 보면 아쉽게도 이 정부는 집토끼 결집 효과만을 통해서도 충분한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하에서 쉬운 재집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듯하다. 선거에는 이길지언정 정작 장기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성공의 실패’라는 역사적 교훈은 눈앞에 닥쳐온 선거 때문에 제 코가 석자인 정치인들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 II. 이미 변화된 국민의 안보 패러다임

이런 가운데에 부시 전 대통령을 한방에 가게 만든 한국판 카트리나 사건이 될지도 모를만한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다. 서해교전의 악몽이 가실 날 없는 그 NLL 앞바다에서 터진 천안함 침몰 사건은 과거 같으면 국가가 주도하여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는 ‘국가안보’의 현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변화된 안보 패러다임은 본 사건을 국가안보문제로 보기보다는 인간안보 즉, 재난구호 혹은 위기관리대처능력으로 보고 있었다. 서해 바다에서 46명의 우리 군이 생명을 잃어가고 이를 구조하는 가운데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인명 희생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에도 정작 정부와 군 당국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일관하며 안보논리와 정보의 투명성 사이에서 일관된 원칙을 조기에 확립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만 더 높였다. 의혹이 의혹을 낳으며 확산되자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최고의 불신을 표하기 시작하며 언제나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자력구제(?)의 길에 나섰다.

## III. 재난의 원인과 위기대처능력을 구별해야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10%나 떨어졌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천안함이 카트리나가 되는 건 또 다른 재앙일 것이다. 이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기 시작하자, 국방장관이 뒤늦게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천안함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듯하다.

본 사건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난의 원인 규명과 재난에 대응하는 위기관리는 별건이다. 후자의 오류를 전자의 논란으로 덮어서도 안 되고 덮을 수도 없다. 카트리나는 천재(天災)였지만 미국 공화당 정부의 대응 과정은 인재(人災)였다는 것이 미국민이 가진 분노의 실체였다.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와 군의 저열한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한, 어떤 원인 규명도 국민의 침묵하는 분노를 추스르기는 어려울 듯하다. 침몰 원인 규명이 당장 눈앞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 위기관리능력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결국 머지않아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 보수의 무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우리 군에게는 한명숙 재판에서 드러난 한국 검찰의 공공성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보라는 관점에서라면 이 점이야말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군 당국이 군이 검찰의 길을 걷는다면 소용없는 기회이겠지만...(2010/04/12)



<각주>

- 1) 이 글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4월 12일자 정세 칼럼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 2) 미국 보수의 집권 전략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옥고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이해정, 2009, “미국 공화당의 위기: 보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 『의정연구』 15권 1호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